



주간통일정세 2009-52(2009.12.21~12.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5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통신, 김정일, 올해 200여곳 현지지도(12/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공장과 협동농장, 학교는 물론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전국 200여 곳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의 한해 현지지도를 결산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1998년 김정일 체제 1기 출범 이후 가장 활발했던 올해 시찰 활동에 대해 “역사가 알지 못하는 초강도 강행군, 빨치산식 대장정이 었다”고 밝힘.
 - 통신은 김 위원장이 올해 첫 현지지도인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해 성진제강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금속공업부문, 2.8비날론 연합기업소와 승리자동차공장 등을 찾았으며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방문하는 등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힘썼다고 주장
 - 또 평양대극장, 김일성종합대학, 회령혁명사적지 등을 찾았고 “포사 격훈련을 여러차례 지도한 것을 비롯하여 조국의 방선천리를 현지시찰하면서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했다”고 통신은 주장
 -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열차가 이제는 정든 집으로 되었다”고 말했다고 소개

- **요미우리신문, 김정일, 2010년 초 중국 방문할 듯(12/21, 요미우리 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1월이나 2월 초 사이에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
 - 요미우리 신문은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과 가까운 북한 고위 관리들이 11월말부터 12월 초에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의 경찰 책임자인 주상성 보안상이 최근 명젠주 중국 공안부장과 회담하는 등 북한 고위 관리들의 중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실현되면 지난 2006년 1월 이후 처음임.
 -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대북 경제 원조 지원책을 제시하고 대신 북한으로부터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약속받을 것으로 전망



- 경제전선"이라며 "2012년에 강성대국 대문을 열려는 당의 결심과 의지를 빛나게 실현할 각오를 안고 진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
-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김국태·전병호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

● **조선신보, 현지지도로 강성대국 중요성 보여줘(12/21, 조선신보)**

- 올해 최고 기록을 세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활발한 현지지도는 '2012년 강성대국' 목표 실현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직접 화법'의 성격을 띠는다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 조선신보는 "2012년 향한 전력질주의 시작"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변이 나는 해" 서막을 연 것은 영도자(김 위원장)의 육성이었다"며 "2008년 12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지도에서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는 호소가 있었다"고 주장, 신문은 이어 "예전에도 2012년 언급이 있었지만 영도자가 몸소 제시한 의미는 컸다"며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인민들을 향한 직접화법'이라고 찬양

● **北신문, 정주영 회장 '띄우기' 눈길(12/5, 통일신보)**

- 통일신보(12.5)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한 노(老)기업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 전 회장의 일생과 업적을 회고, 북한 언론이 특별한 계기도 없이 고(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통일운동사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인사'라며 치켜세움,
- 신문은 "겨레 통일운동사에 경제협력으로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해 뚜렷한 자국을 남긴 인사가 적지 않은데 그 가운데 남조선(남한)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이던 정주영 선생도 있다"고 고인을 평가
- 신문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대북사업 추진배경에 대해 "한생을 자본 축적과 기업 확대를 위해 살았지만 인생의 저녁놀을 바라보는 시점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면서 여생을 고향이 있는 북과 경제 협력에 바치고 싶어했다"고 소개

다. 경제 관련

● **北, 평양서 성진제강 노동자 환영행사(1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5일 평양체육관에서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한 함경북도 김책시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노동자·기술자 대표단을 환영하는 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는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기술자들에게 보내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 공동명의로 '축하문'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달, '축하문'은 "우리 식 제철제강법의 대성공은 당과 수령



계 무한히 충직한 성장(성진제강) 노동계급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전인민적, 전국가적인 대경사”라고 강조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성강의 노동계급이 주체철에 의한 강철생산 방법을 완성한 것은 참된 충신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며 3차 핵시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해 주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언

● 북한의 화폐개혁과 쌀값 동향(12/24, 연합뉴스)

- 북한의 화폐개혁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국은 북한의 쌀값 동향을 예의주시, 지난 2002년 북한이 취한 7:1경제관리조치에 따라 쌀값이 모든 물가의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쌀값의 추이가 이번 화폐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좋은 벗들’은 최근 북한이 신·구권 1대100 비율로 화폐개혁을 단행한 후 각종 상품의 새 국정 가격을 정하면서 쌀값은 kg당 23원으로 공시했다고 전언,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24일 그것이 국정 가격인지, 시장에서 임시 통용되는 거래 기준인지 불확실하다는 반응을 보임.
- 다만 23원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주력, 일단 신·구권 교환 비율과 물가를 연동할 경우 화폐개혁 후 국정 쌀값은 현행 kg당 45원의 ‘100분의 1’인 45전이 되는데, 실제 국정가격이 kg당 23원으로 결정됐다면 북한 당국이 쌀값을 50배 이상 올린 셈이 됨. 일부 관계자들은 화폐개혁 직전 쌀 1kg의 시장 거래가격을 현실화한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 다시말해 북한내 시장에서 국정 가격의 40~50배인 1천700원~2천500원으로 쌀값이 통용됐으며, 북한 당국이 이를 반영해 새로운 국정 가격을 정했다는 것임.
-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소식지들이 전하는 북한의 쌀 국정가격이 최종 확정된 가격인지, 국정 가격이 확정되기 전 시장에서 임시로 통용되고 있는 일종의 ‘기준 가격’인지 확실치 않다”고 언급
- 한 대북소식통은 “북·중간 왕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국정 쌀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kg당 20~30원에, 일부 지역에서는 40~6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언

● 北 곡물 501만t 생산, 도정前 생산량인 듯(12/23, 연합뉴스)

- 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비공식 경로로 확인한 결과, 북한이 올해 쌀, 옥수수, 감자 등 곡물 501만t을 생산했다고 FAO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북한은 곡물 생산량을 공개할 때 도정 전의 조곡을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이번 FAO 보고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 북한이 생산했다고 보고한 501만t을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정곡으로 환산하면 대략 400만~410만t이 될 것으로 추산됨.
- 일례로 조곡에서 정곡으로 가공될 때 무게가 가장 많이 빠지는 쌀의 경우 추수한 낱알에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왕겨를 벗겨내고 알곡도



정까지 마치면 통상 원래의 70%로 줄어들. 우리 농촌진흥청은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정곡 431만t으로 추정했는데 이 수치와 비교하면 올해 생산량(400만t 내지 410만t)은 작년보다 최고 7% 가량 줄어든 셈임.

- 전문가들은 2천405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연간 정곡 500만t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부족분 100만t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산술적으로 500만명 가까운 주민들이 내년에도 식량난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 식량지원 축소, 北 식량난 설상가상(12/22, 연합뉴스)

- WFP는 2008년 한해 동안 미화 1억4천8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의 8개 도(道), 131개 군에서 620만명에게 지원,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 그 지원 규모를 6개 도, 62개 군의 200만명으로 축소했고 후속 조치로 함흥, 해주, 혜산의 현장사무소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힘.
- WFP가 북한 식량지원에 투입한 예산은 올 들어 8월까지 6천100만 달러(월 763만달러)에 그쳐 작년(월 1천233만달러)에 비해 월평균 대비 38% 감소했음. 지원 인원을 봐도 작년 전체의 620만명(월 51만7천명)에서 하반기 200만명(월 33만3천명)으로 36% 줄어든 셈임.
- 이같은 WFP의 지원 축소는 올해 북한의 농작물 작황이 별로 좋지 않고, 남한의 식량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식량 수급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임.
- WFP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6년 1천800만달러, 2007년 4천800만달러 수준에 머물다가 2008년 북핵 협상의 진전에 따라 미국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급증했음. 그후 북미 양국간의 핵협상이 다시 고착 상태에 빠지고 식량지원 모니터링 조건을 놓고도 이견이 불거져 결국 2008년 9월부터 WFP를 통한 미국의 식량지원은 전면 중단됐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보상으로 2008년 5월 식량 50만t을 12개월에 걸쳐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에 전달된 물량은 16만9천t에 그쳤음. 실제로 WFP는 대북 식량지원 축소 계획을 담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모금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기도 했음.

● 北전화요금, 화폐개혁 이후 6배 올라(12/21, 자유북한방송)

- 북한 당국이 전격 단행한 화폐개혁 이후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신소의 공용전화 사용요금이 이전보다 6배쯤 올랐다고 자유북한방송이 21일 보도
- 이 매체의 양강도 혜산시 통신원은 “구권 기준으로 분당 3원하던 시내통화요금이 화폐개혁 이후 신권 17전으로 올랐고, 시외통화는 도와 시, 군까지의 거리를 따져 요금을 물게 만들었다”며 “100:1 화폐교환 비율로 보면 6배 정도 올라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언



- 언뜻 보기에는 사용요금 단위가 ‘원’에서 ‘전’으로 내려 인하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화폐 기준으로 볼 때 분당 3원에서 17원으로 올린 것임.

라. 군사 관련

● 北, 美여기자 체포 초병 ‘영웅’ 대접(12/24, 조선중앙TV)

- 북한 국경을 무단 월경했던 미국 여기자들을 붙잡은 북한군 초병들이 표창을 수여받는 등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조선중앙TV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8주년을 맞아 ‘불패의 강군을 키우신 위대한 영장’이라는 텔레비전 기념무대를 내보냈는데 이 프로그램에 미국 여기자들을 직접 체포했다는 국경 초병 손용호와 김철이 출연, 사회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 여기자들을 체포한 이들의 공을 높게 평가해 ‘김일성 청년영예상’을 수여했으며 고향으로 특별 휴가를 보내줬다고 소개

● 대청해전 이겼다, 北거짓선전(12/24, 조선중앙TV)

- 북한이 11월 10일 일어났던 ‘대청해전’에서 승리했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측 경비정은 우리측 해군에 의해 반파된 채 퇴각했고 여러 명의 사상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조선중앙TV가 24일 방영한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8주년 기념 방송에 대청해전에 참전했다는 해군들이 나와 “우리가 쏜 명중 포탄에 적진 사령탑이 날아가고 선체에 구멍이 뚫렸다. 먼저 두 척이 연기를 내뿜으며 달아나고 나머지 함선들도 황급히 달아났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펼침.

● 北, 내전 콩고共に 무기 3400t 밀매(12/23,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이 지난 1월 내전(內戰)이 한창인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에 무기 3400여t을 밀매했으며 이 중 상당량이 콩고 반군과 인근 국가에 유입됐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3일 유엔 안보리 콩고조사위원회 위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콩고조사위의 디트리히 위원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21일 북한 선박인 비로봉호가 콩고의 보마(Boma)항에 입항해 최근 태국에서 압류된 북한산 무기 35t의 100배가 되는 3400여t의 무기를 하역했다”고 주장, 그는 “북한 무기가 상당히 현대화된 무기였다는 정보는 입수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만약 전량 AK 소총이었다면 80만정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라고 설명 북한은 지난 5월 콩고에 군사 교관을 보내 약 4주간 콩고 정부군을 훈련시켰으며 그 무렵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
- 또 디트리히 위원은 “한 정보에 따르면 콩고 동부에서 활동하는 반군들의 첨단 무기도 북한에서 수입된 것과 같은 종류”라며 “(콩고 정부



군의 무기는) 짐바브웨 같은 주변 국가들에 다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

- 2008년 채택된 콩고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 1807호는 ‘콩고와의 모든 무기 거래와 군사 교육 등은 반드시 유엔에 사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있음.

● **北해군사령부의 NLL도발은 협박용(12/21, 북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

- 북한 해군사령부는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에 대응해 우리 해군은 아군(북한군)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해안 및 섬 포병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의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힘.
-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해상 군사분계선은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있음. 따라서 북한 해군이 밝힌 ‘평시 해상사격 구역’은 우리 해역과 겹치기 때문에 북한군의 사격 훈련이 우리 선박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됨.
- 실제 북한은성명에서 “아군 해상 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선 서해에는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선포한 해상 군사분계선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화폐개혁 후 안정 위해 불만 차단 전력(12/27, 아사히 신문)**

-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구권 화폐의 한도액을 1인당 50만원으로 올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이자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정은씨를 지칭하는 ‘김대장’ 명의의 구제금을 가구당 500원 지급하기로 하는 등 주민 불만을 차단하고 정은씨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나서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당초 1인당 10만원까지 새 화폐를 교환해 주기로 했으나 각지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상한액을 15만원, 30만원으로 올렸다가 최근에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또 노동자의 급여는 구화폐의 금액을 그대로 신화폐로 지급, 실질적으로 100배 인상하는 방안을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급여는 아직 지급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관측도 있음. 500원의 구제금은 12월 20일께 ‘인민반’이라고 불리는 말단 주민자치조직의 간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실제 주민들에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는 분명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반신반의하고 있으며, 평양의 아주 일부 주민에는 이미 지급됐다는 정보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언



- 새 화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국은 국영 상점에 대해 새 화폐로 정찰제 판매를 지시, 이들 가게에서는 1kg을 기준으로 쌀 44원, 돼지고기는 45원, 콩 12원이라고 표시돼 있음. 하지만 국영 상점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얼마 되지 않고, 암시장에서는 이 가격의 5~120배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소개
 - 이런 가운데 거리를 달리는 당국의 선전차는 “화폐개혁은 인민의 물질문화를 평등하게 하려는 올바른 조치다”, “인민이 마음편히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반복해서 방송하는 등 주민의 불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北, 올 스포츠 최대성과 월드컵 진출 꿈아(12/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올해 스포츠 부문의 최대 성과로 44년 만에 이룩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진출권 획득을 꼽음.
 - 통신은 ‘훌륭한 체육성과들이 이룩된 한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6월 남자축구선수들은 국제축구연맹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조선축구의 위력을 다시금 과시하였으며 온 나라를 기쁨으로 설레이게 하였다”며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무려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문대에 서게 된 흥분을 되새김.
 - 통신은 이어 레슬링, 체조, 유도, 역도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국제경기들에서도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으며 지난 9월 덴마크에서 열린 2009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 55kg급에서 우승한 양경일(20), 지난 7월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25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체조의 홍은정(20), 이달 홍콩에서 열린 제5회 동아시아게임 여자역도 63kg급에서 우승한 박현숙(24) 등을 대표적인 선수로 거론
- **北, 악수는 우리 민족에 안 맞아(1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사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의 절은 우리 민족의 감정과 정서에 맞으며 생활적으로도 매우 편리하고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인사법”이라고 규정, 노동신문이 난데없이 서양식 악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고유의 인사법을 권장하고 나섬.
 - 신문은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우리 인민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예절 바른 것이 특징”이라며 “악수를 하는 것과 같은 인사법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 신문은 민족 고유의 인사법이 도덕적이고 위생적이라는 설명만 했을 뿐 갑자기 왜 현시점에서 악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음.
 - 앞서 조선중앙TV도 11월 4일 “감기 예방에 제일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손을 정상적으로 씻는 것”이라며 손 씻기를 권장하는 방송을 내보냈음.



- **北주민 50만명 몰래 성탄절 기념(12/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당국의 감시를 피해 가정과 지하교회에서 기독교를 믿는 신자 수가 약 40만~50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비밀리에 성탄절을 기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국제기독교 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 관계자를 인용, 보도
 - RFA는 “북한 주민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평범한 하루와 다르지 않지만, 지하교인들은 성탄절 이브에 따로 가족끼리 만나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다”며 “북한 내 지하 기독교 신자 중 7만~10만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
 - 북한 당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평양에 교회와 성당을 세우고 1만2000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미 국무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9년 연속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

- **北, 정대세·안영학에 ‘인민체육인’ 증서 전달(12/25, 조선신보)**

 - 북한 축구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인 정대세(25, 가와사키)와 미드필더 안영학에게 12월 22일 북한 ‘인민체육인’ 칭호 증서를 전달했다고 조선신보가 25일 보도
 - 신문은 “인민체육인 칭호를 전달하는 모임이 22일 (일본 도쿄의) 조선회관에서 진행됐다”며 허종만 조총련 책임부위원장이 이들과 함께 북한축구협회 부회장인 김광호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명예칭호 증서를 전달했다고 보도

- **北과격적 금전 살포, 돈풀어 ‘민심’ 사나(12/23, NK지식인연대; 데일리NK)**

 - ‘NK지식인연대’는 23일 홈페이지 글에서 통신원 전언을 인용, “지난 18일부터 모든 협동농민(협동농장원)에게 국가장려금으로 가구당 1만 4천원씩 지급하고 있다”며 “북한의 현재 환시세로 볼 때 미화 350달러가 넘는 금액”이라고 밝힘.
 - 이 장려금을 화폐개혁 이전의 구권으로 환산하면 140만원 상당인데, 이는 화폐개혁 이전 많이 받는 노동자(월급 4천원)의 29년치(350개월) 월급에 해당, 장려금은 가을철 추수 후 농장원에게 지급되던 분배금이나 국가가 곡물을 구매하고 지급하는 수매금이 아니라 협동농장의 모든 가구에 지급되는 것이라고 이 단체 관계자는 설명
 - 데일리NK도 북한 당국이 협동농장 농민들에게 적게는 1인당 1만5천 원부터 많게는 15만원까지 거액의 신권을 한해 농사를 결산하는 ‘현금분배’ 또는 ‘국가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언, 연간 곡식생산 목표를 달성한 농장에는 1인당 10~15만원씩의 현금분배를, 그렇지 못한 나머지 농장에는 장려금 명목으로 1인당 1만5천원씩을 주고 있다고 전언
 - 데일리NK는 22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 “노동자와 사무원에 대해 17일



부터 화폐개혁 이후 첫 임금이 지급됐는데 새 임금에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당시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소개

● 北, 부유층 잡기 위한 제 2라운드 조치(12/23, 조선일보)

- 북한이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 1차로 시장 상인들과 부유층의 현금을 흡수한 이후 달러와 유로화 등 외화를 대량 보유한 ‘진짜 숨은 큰손’들을 잡기 위한 제2라운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22일 알려짐.
-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2월부터 중순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조차도 달러 유로화 등 외화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철저히 북한 돈으로 바꿔서만 사용토록 정함.
- 종전에는 호텔이나 시장 등에서 북한 돈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달러 등 외화를 직접 쓰는 게 가능했다고 함. 북한 당국은 또 당·정(黨政)의 외화별이 기관들이 달러를 이유 없이 오랜 기간 갖고 있거나, 현금 결제시 달러로 할 경우 모두 몰수조치하겠다고 통고했음. 북한 당국은 이런 조치를 공표한 뒤 전국의 유선방송 등을 통해 “달러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각 신고하라”고 주민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번 조치로 일단 화폐개혁 이후 급등하던 달러 가치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효과는 거두고 있다는 전언
- 탈북지들에 따르면 북한의 웬만한 고위층과 외화별이 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히 외화로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돈 많고 고위층일수록 북한 돈은 쓸 만큼만 바꾸고 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관행이 됐다는 것임.

● 창광음식점 거리 새단장(12/22, 조선신보)

- 평양 중심부 창광음식점 거리가 개건(改建)돼 12월1일부터 다시 영업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 고려호텔 근처 창광음식점 거리는 1985년 8월 꾸러져 20여개 식당들이 모여 있었으나 2008년 4월부터 개건공사가 시작돼 마무리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

● 北, 새 화폐로 종전 수준 임금 지급(12/22, 데일리NK; NK지식인연대)

- 북한 당국이 ‘100대 1’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처음 노동자들의 임금을 예전 수준에 맞춰 새 화폐로 지급했다고 데일리NK가 22일 보도
- 데일리NK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 “노동자와 사무원에 대해 17일부터 화폐개혁 이후 첫 임금이 지급됐지만 당 기관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권력기관 종사자들은 제외됐다”면서 “새 임금에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당시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전언
- 매체에 따르면 7.1조치 때 북한의 임금은 편의봉사소 등 경노동 분야 1천200원, 도시건설대 등 일반 건설분야 1천500원, 탄광 등 중노동 분야 1천700원, 당 간부 3천300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새 화폐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NK지식인연대’도 통신원 전언을 인용,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에



서 보건, 교육 부문의 공직자들에게 월 생활비를 기존 액수대로 지급했다”며 “이들의 월급은 평균 1천800원 내지 2천600원 수준인데 화폐개혁 이후 신권의 가치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라고 언급

- 단체는 이어 “현재 시장 상인들 사이에 유통되는 미 달러와 북한 돈의 환전비율이 달러당 38원 정도인데 회령과 온성에서 지급된 월급을 달러로 환산하면 50달러 내지 70달러로, 화폐개혁 이전에 비하면 100배로 늘어난 셈”이라며 “실제로 시장에서 쌀(kg당 35원) 50kg 내지 70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 또 “공장, 기업소에서든 빠른 시일 내에 월급을 기존대로 지급하고, 협동농장 농민에 대한 현금 분배도 종전대로 이뤄진다고 한다”면서 “새 화폐로 기존 수준의 월급을 지급한다는 소문이 현실화됨에 따라 화폐개혁에 대한 주민들 반응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전언

● 김정일, 묘향산을 ‘세계적 관광등산지’로 조성 지시(12/22, 조선신보)

- 북한은 묘향산을 세계적 관광등산지로 조성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지시에 따라 전문가들을 동원해 124곳의 명소를 찾아냈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 문화보존지도국 기영남(42) 처장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이) 묘향산지구에서 새로운 명소를 더 많이 찾아내 인민의 문화휴식터, 세계적인 관광등산지로 훌륭히 꾸리는(조성하는)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면서 그 결과 폭포, 담소, 기암, 봉우리, 전망대, 절, 약수, 샘물 등 124곳의 명소를 찾아냈고, 이 가운데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폭포 21곳, 담소 5곳, 기암 21곳 등 47곳에 대해 북한의 고고학, 언어학, 역사학, 지리학 전문가들이 모여 형태와 특성에 맞게 이름을 달았다고 신문은 설명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로버트 박, 월북 직후 체포된 듯(12/27,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무단으로 월북한 재미교포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28)씨가 북한 국경을 넘자마자 군인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자유와 생명 2009’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박씨의 월북을 목격한 인물의 말을 인용해 “박씨가 얼어붙은 폭 30m 정도의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가자마자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밝힘.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는 중국 지린(吉林)성 룡징(龍井)시 카이산툰(開山屯)진에서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방원리로 들어갔으며 왼손에 성경책을,



오른손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출력한 종이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강을 건넜음.

- 한편 미국은 박씨 월북 직후 “미국 정부는 국민의 보호와 안녕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으며 북한 언론은 이틀째 이 사건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재미교포 인권운동가, 두만강 건너 北 무단진입(12/26, 연합뉴스)

- 재미교포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28)씨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성탄절인 25일 중국에서 두만강을 건너 아무런 허가조처 없이 북한에 들어갔다고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가 26일 밝힘.
- 전세계 북한 인권 및 탈북자 관련 100여개 단체간 네트워크라는 ‘자유와 생명 2009’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네트워크 대표인 박씨가 성탄절인 어제 중국 연길을 거쳐 오후 5시경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쪽으로 들어갔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박씨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휴대하고 갔는데 편지에는 죽어가는 북한 인민들을 살릴 식량, 의약품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경을 개방할 것과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힘.

● 北, 미국에 투자 적극 요청, 못하겠다 했더니 충격받더라(12/26, 조선일보)

- 북한은 최근 잇달아 미국의 기업인들과 민간단체들을 초청해 투자를 요청했다가, 유엔 안보리의 1874호 대북제재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4일부터 4일간 방북한 찰스 보이드(Boyd) 미 ‘국가안보사업이사회(Business Executives for National Security·BENS)’ 회장은 24일 “북한 관리들은 우리 일행이 투자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연실색했다(dumbfounded)”고 언급, 보이드 회장은 ‘북한경제위치’라는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들은 우리가 북한에 몇 달러도 투자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불쾌해했다”고 설명, 그는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대북 투자에도 관심이 없고, 국제 제재 탓에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 관리들은 우리가 기업인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북한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고 설명
- 보이드 회장은 “북한 관리는 투자문제를 논의하기 바랐을 뿐, 외국인 투자와 핵 문제를 연계해 말하기 싫어했다”고 소개, 또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주변국들에 의해 북한이 얼마나 위협당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말했다고 전언



● **美, 국제사회 대북공조 올해 핵심 성과(12/2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3일 공개한 ‘개입(engagement)의 새 시대’라는 제목의 2009 회계연도 재정보고서를 통해 미 외교의 첫 번째 전략적 목표는 평화와 안전보장 달성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채택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비난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 것”이 이와 관련된 핵심 성과 중 하나라고 밝힘.
- 또 대북공조 유지 외에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상 착수, 미·중 전략경제대화 첫 개최 등도 핵심 성과라고 밝힘.
- 이어 북한의 핵무기 추진, 무기기술 확산, 인권, 인도적 문제 등 광범위한 북한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올해 초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했다고 소개, 이와 관련, 보고서는 미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복귀 등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힘.

● **美, 보즈워스 방북이후 北 신호 못받아(12/23, 연합뉴스)**

- 미국은 22일 북한으로부터 아직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신호는 받지 못했다고 밝힘.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북측으로부터 향후 행보와 관련한 신호(indication)을 얻었느냐는 질문에 “받지 않았다”고 언급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우리는 (북측과)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그들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신호를 명백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
- 그는 이어 ‘6자회담이 내년 2월 이전에 개최되어야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 소식통의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사람들이 6자회담이 죽었다고 선언한 것을 이전에도 여러번 봤지만, 그런 사망 주장들은 너무 이른 것이었다”고 지적
- 이 밖에 그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시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

나. 북·중 관계

● **北, 숨진 선양 北영사 살해됐다(12/22,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0월 실종됐다 변사체로 발견된 자국 선양(瀋陽)총영사관의 김모 영사가 피살된 것이 분명하다며 중국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섬. 북한 당국이 김 영사의 사망과 관련,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 공안 당국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근거로 그동안 그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



- 북한 당국의 한 관계자는 22일 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숨진 김 영사의 온몸이 멍 투성이었고 머리에도 흉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15cm 크기의 상처가 있었다”며 “사망한 김 영사는 피살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힘. 그는 “자살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자살이었다면 최소한 유서라도 남겼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여러 정황상 자살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잘라 언급, 이 관계자는 김 영사의 실종 및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며 중국 측의 안이한 대처에 불만을 표시
- 김 영사가 지난 10월 6일 오전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영사관을 떠난 뒤 오후 1시께 지인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곧 돌아가겠다고 전화를 걸어왔으나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 북한 선양 총영사관은 이튿날인 7일까지 김 영사가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자 중국 공안 당국에 실종 신고를 냈음. 김 영사에 대한 중국 공안의 조사가 진척이 없던 10월 19일께 중국의 한 주민이 선양의 훈허(渾河) 강변에서 주웠다고 김 영사의 신분증을 갖고 북한 총영사관을 찾았음. 북한 측이 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중국 공안은 이틀 뒤인 21일께 모 병원의 시체 보관실에 안치돼 있던 김 영사의 시신을 확인시켰다는 것임.

다. 북·러 관계

-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기념행사 개최(12/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8주년과 김 위원장 생모인 김정숙의 92번째 생일을 맞아 23일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행사에는 러시아의 의회, 외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
-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김정일에게 새해맞이 선물 전달(12/27, 조선중앙방송)
 -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이 새해를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선물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무용단 지배인은 12월 22일 김용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에게 선물을 전달
- IAEA도 북핵 문제 해결 관여해야(12/23, 이타르타스 통신)
 -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은 23일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AEA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개입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그것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며 IAEA의 동참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비친 것이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이런 북한의 동의를 내년 초에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피력, 이어 “이 과정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북한도 ‘유연성’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힘.

- 그러나 보르다브킨 차관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은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

● 러시아 극동지역서 北주민 12명 한국행(12/23, 교도통신)

- 별목공과 탈북자 등 북한주민 12명이 지난 9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에서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HCR)의 도움으로 한국행에 성공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3일 보도
- 통신은 러시아 보안 당국자와 다른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근로 비자가 만료된 별목공과 탈북자인 이들은 2007년과 올해 초 사이 편지와 전화 등을 통해 모스크바 UNHCR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와 UNHCR이 이들의 한국행을 도왔으며 현재 다른 북한 주민 4명의 망명 신청건을 다루고 있다고 전언
- 이 과정에서 러시아 이민당국은 북한 주민의 새로운 탈북 루트로 러시아가 이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를 통해 탈북 시도를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로, 교도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근로자가 집단으로 탈북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언
- 교도통신은 이들 12명 외에도 예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북한 남성 근로자가 한국총영사관에 망명을 요청, 한국행을 승인받았으며, 2004년에도 두 명의 북한 주민이 한국영사관과 미국영사관에 각각 진입한 이후 한국행에 성공했다고 보도
- 교도는 이어 원칙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국경을 넘어 탈북하거나 비자가 만료된 근로자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고 있지만, 한 러시아 이민관리는 망명에 성공한 이번 12명의 경우처럼 유엔을 통해 망명을 요청하면 인도적 관점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고 소개
- 러시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극동의 아무르주에만 현재 1천700명의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러 외무부, 서해 상 남북한 자제력 보여야(12/23, 연합)

- 북한이 서해 상 군사분계선 부근의 자기 측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22일 남북한 당국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최대한의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 러시아 외무부의 알렉세이 사조노프 정보언론 부국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 구역’을 지정한 데 대해 우



려한다”라며 “우리는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힘. 그는 아울러 “남북한 모두 서해 상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력 충돌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나 성명전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

라. 기타국가 외교 관계

- **北-브라질, 무역협정 수정의정서 체결(1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브라질간 무역협정 수정 의정서가 21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룡남 무역상이, 브라질 측에서 북한 주재 대사도 각각 참석
- **스위스영화상영주간이 개막(12/21,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스위스연방 사이의 외교관계 수립 35돌에 즈음해 20일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스위스영화상영주간이 개막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
 - 개막식에는 북한-스위스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회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꾼(간부), 평양주재 스위스연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했으며, 스위스 예술영화 ‘하이디’를 감상했다고 방송은 보도

3. 대남정세

- **다음주 초 대북지원 기금 200억원 의결(12/25, 연합)**
 - 정부가 12월 28일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쓸 남북협력기금 200여억원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 소식통은 25일 “현재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심의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28일 통일부 장관 서명을 거쳐 지원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 지원 대상 및 규모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의 대북 영유아 지원 사업에 150억원 이상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영유아 영양 지원과 기초 의약품 제공, 북한 산림녹화지원 등에 약 6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고 이 소식통은 전언
- **北, 해외공단 시찰에 관심은 임금뿐(12/23, 연합)**
 - 북한은 지난 12~22일 이뤄진 해외공단 남북 공동시찰에서 임금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23일 알려짐.
 - 우리측 단장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 회담대표는 브리핑에서 “북측은 해외공단의 근로자 임금, 운영 체계, 보험·회계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며 “특히 개성공단(우리측) 입주기업들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가 종종 있다며 현지 기업측에 관련 질문을 많이



했다”고 전언

- 북측은 이번 시찰에서 베트남 공단의 최저임금은 60달러, 중국 공단은 100달러를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 현재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사회보험료 제외)이 57달러쯤인 점을 감안할 때, 북측이 이번 시찰을 계기로 공단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또 북측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해외기업의 경우, 식비나 운영비를 임금에 포함시키는지 등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언,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에 근로자 기숙사(4만여명 규모)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남북 시찰단은 10박11일간 중국·베트남 공단의 9개 기업(한국기업 6개) 공장과 공단관리위원회 등을 둘러보았으며 비용은 전액 우리가 부담했지만 통일부 최보선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구체적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

● 서해상 표류 北주민 7명 송환 완료(12/23, 연합뉴스)

- 서해상에서 표류해 남측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7명이 23일 오전 11시 5분 북한으로 송환됐음. 정부소식통은 23일 “오늘 오전 북측과 판문점 연락관 협의를 통해 북한 주민 7명의 송환시점을 정했고, 이에 따라 오전 11시5분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에 송환했다”고 발표
- 북한 주민 7명은 12월 21일 서해상에서 소형 전마선을 타고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덕적도 서방 17마일 해상까지 표류했다가 우리 어선에 발견돼 해경 함정에 예인됐음. 이들이 정부 합동심문 과정에서 전원 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정부는 2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 송환 의사를 전달

● 정부, 北내성결핵 퇴치지원 검토(12/22, 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 내성결핵 퇴치에 필요한 치료제 제공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짐.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에 내성이 강한 결핵이 생겼다고 한다”며 “결핵은 빠른 시기가 중요하며, 곧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
- 내성결핵은 일반 결핵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2차 항생제를 써야 하는 질병이다. 약값이 고가인 데다 완치율도 낮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으며, 내성결핵환자에게서 전염된 환자가 바로 내성결핵이 되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유관당국은 북한 결핵 관련 지원 규모 및 경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아직은 외교부나 유진벨 재단이 북한 결핵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협의를 요청해오지는 않았다”며 “내년에 유진벨 재단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IAEA도 북핵 문제 해결 관여해야”(12/24)

-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은 23일 “북핵 문제 해결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여해야 한다”고 밝힘. 보로다브킨 차관은 이날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AEA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개입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그것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며 IAEA의 동참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비친 것이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함.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이런 북한의 동의를 내년 초에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피력함.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북한도 ‘유연성’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힘.
- 그러나 보르다브킨 차관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은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보로다브킨 차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일정한 공감대를 표시한 것에 대해 러시아 당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임.
- 특히 IAEA에 대한 언급은 지난 4월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서 IAEA 감시요원들이 추방된 이후 현지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IAEA가 어떤 식으로든 북핵 대화 틀에 끼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됨. 이달 초 IAEA 앤드루 세멜 워싱턴 대표도 미국 의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핵 6자회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때 IAEA는 비핵화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나. 미·북 관계

● “美, 군축협상 형태 북핵문제 접근 안할것”(12/24)

-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우크라이나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입법조사처는 이날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핵 문제 해결사례를 비교, 북한 핵 문제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함.
- 입법조사처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북핵문제 해결 방식으로 제시한 우크라이나 모델은 ‘협조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으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하고, 우크라이나의 핵 과학자·기술자에 대해 교육, 재취업 등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것임.
- 입법조사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일정 수준을 넘은 상태이고 핵개발 관련 시설·기술자·과학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하며, 북한도 핵무기 포기에 따른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근거를 제시함.
- 핵보유를 인정한 인도 및 파키스탄의 핵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이 미국을 겨냥하고 ▲미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못되며 ▲동북아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함.
- 특히 입법조사처는 “북한의 주장처럼 미국이 군축협상 형태로 북핵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에게 북한은 “제재나 유인책을 동원해 미국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나아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협상과 강제를 병행하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북핵문제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조사처는 전망함.
-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 등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당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황을 장악하며, CTR 프로그램에 대비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입법조사처는 “우리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불완전한 핵 포기’를 타협안으로 받아들일 경우 강력히 반대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1~2개 핵무기는 우리나라에 치명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미국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보이드 회장 “북한의 구애 계속될듯”<RFA>(12/24)

- 최근 기업가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미국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의 찰스 보이드 회장이 “미국 민간대표단의 방북으로 지속적 접촉이 이뤄진데 대해 북한이 만족해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향한 북한의 구애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지난 1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방북한 보이드 회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진출하면 경제적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먼저 핵을 포기해야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을 함께 전달했다”고 말함. 그는 이어 “방북 기간 북한의 한 관리가 ‘년-루거 프로그램’을 미국기업가 대표단의 방북 목적과 연계해 거론하며 관심을 보였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이번 방북은 이 프로그램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구체적인 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1991년 미 상원의 샘 년, 리처드 루거 두 의원의 주도로 제정된 법안을 근거로 운영되는 ‘년-루거 프로그램’은 군사용 핵 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핵 과학자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옛 소련의 핵무기 해체를 지원함.

● 美 “보즈워스 방북이후 北 신호 못받아”(12/23)

- 미국은 22일 북한으로부터 아직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구체적인 신호는 받지 못했다고 밝힘.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북측으로부터 향후 행보와 관련한 신호(indication)를 얻었느냐는 질문에 “받지 않았다”고 말함.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우리는 (북측과)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그들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신호를 명백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함.
- 그는 이어 ‘6자회담이 내년 2월 이전에 개최되어야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 소식통의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사람들이 6자회담이 죽었다고 선언한 것을 이전에도 여러번 봤지만, 그런 사망 주장들은 너무 이른 것이었다”고 지적함. 이 밖에 그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시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함.

● “세계식량계획, 대북 식량지원 대폭축소”<VOA>(12/22)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올 하반기 대폭 줄였으며 내년에는 더 축소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WFP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함.
- WFP는 ‘대북사업 수정 보고서’에서 “2009년 11월 현재 대북사업 필요예산 5억400만 달러 중 17%만 모금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저조해 대폭적인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이 방송은 전함. 보고서에 따르면 WFP는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식량지원 대상 지역을 북한의 8개 도(道), 131개 군에서 6개 도, 62개 군으로, 대상 주민수는 62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축소했고,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자체 국제요원 숫자도 초기 56명에서 16명으로 줄임.



- WFP는 또 함흥, 해주, 혜산의 현장사무소를 폐쇄할 예정이고,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고아원·탁아소·유치원·인민학교 및 소아과 병동의 어린이와 노인, 임산·수유모 등 ‘가장 취약한 계층’ 200만 명한테만 식량을 공급할 계획임.
- WFP는 그러나 2008년 9월부터 시작한 대북 긴급구호 사업이 올해 11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내년 6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함. WFP 보고서는 “비록 활동 규모는 줄었지만 북한 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 가장 배고프고 취약한 이들에게 식량 지원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장 접근 없이는 식량 지원도 없다’는 원칙도 계속 엄격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 “北권력승계 성공, 내전, 붕괴 3가지 시나리오”(12/22)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권력체제와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중 김 위원장 아들로의 권력승계나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관리된 권력승계(Managed Succession)’ 가능성이 점점 유력해 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21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하는 계간지 ‘워싱턴 퀴털리’에 기고한 ‘김정일 후계자의 딜레마’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전망함.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 ▲관리된 권력승계 ▲경쟁적 권력승계(Contested Succession) ▲권력승계 실패(Failed Succession)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함.
- 관리된 권력승계는 김정일의 아들 중 한 명이나 집단지도체제로 권력이 성공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북한의 새 지도부는 북한 내의 정치적 통제를 공고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핵무기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소장은 예상함. 스나이더 소장은 경쟁적 권력승계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 내 여러 파벌이 권력 쟁투에 나서면서 내전 상황까지 예상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이 경우 각 파벌은 중국이나, 한국, 미국 등 외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함.
- 그는 이 경우 서로 다른 외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북한 내 파벌이 대리전 성격의 내전을 벌일 수도 있다고 분석함. 그는 또 북한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들 파벌이 북한 정치의 급진적 변화 가능성 및 경제적 개혁과 개방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고 내다봤음. 물론 민족주의적 지도자가 출현하며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 스나이더 소장은 권력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한국이 북한을 흡수할 자연스러운 후보라고 전함. 그는 이 경우 통일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의 안보 이익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킬 역대 체제의 창



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스나이더 소장은 이런 3가지 시나리오 중 관리된 권력승계가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북미관계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 이 밖에 그는 90년대 중반 김일성 사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와는 달리 현재의 권력승계 작업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김정일 이후 새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일이 권력을 잡을 때처럼 잘 훈련되지 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함. 그는 북한의 새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핵무기와 경제개혁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및 시장경제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등 3가지 주요한 과제에 직면 할 것이라고 관측함.

다. 기타

● “北 사유재산 제한, 주민반발로 주춤”<WP>(12/27)

- 북한의 최근 사유재산 제한 정책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뒷걸음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27일 전함. WP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지난 10년간 민간시장을 통해 축적된 사유재산을 제한하기 위해 이달 초 화폐개혁 등의 정책을 전격 실시했지만 60여 년간 정권에 복종해온 주민들로부터 “극히 이례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동부 연안의 한 도시에서는 ‘몰수 정책’에 항의하는 소요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고까지 나와 북한 당국이 결국 화폐 교환 비율을 완화하고 보유액 상한을 높임. WP는 이 같은 상황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제약”을 보여준다면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의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진단함.
- 또 “북한 인구의 절반을 부양하는 민간 시장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 시장이 너무 커지고 중요해져 김정일 국방위원장조차 붕괴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지적함. WP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군대를 동원해 주민들의 저항을 진압할 수도 있다면서 화폐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음.
- 신문은 아울러 북한은 현재 김 위원장이 자신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으로 후계구도를 만들어가는 과도기라며 전문가들은 이번 화폐개혁이 김 위원장의 시장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함.

● 北 무기 수송 승무원 구금 12일 재연장(12/25)

- 태국의 방콕 형사법원은 25일 북한산 무기를 운송하다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 승무원들에 대한 구금 기간을 추가로 12일 연장함. 법원은 앞서 14일에도 경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구금 기간을 12일 연장했었음.
-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출신 승무원 5명은 불법무기 소유 혐의를 받



고 있으며 최장 84일까지 구금이 연장될 수 있음. 이들은 화물기의 최종 목적지가 이란이 아니라 스리랑카였으며 석유 시추 장비를 운반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태국 정부는 35t의 압류 무기를 조사한 뒤 유엔에 보고할 예정임.

● “北화폐개혁, 차기 정권에 역효과” <美전문가>(12/24)

- 최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차기 정권에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미국 국방분석연구소(IDA)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이제 당국을 믿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게다가 초보적 시장활동으로 스스로 먹고살자는 생각에 열심히 일한 주민들한테 찬물을 끼얹은 셈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함. 오 박사는 또 “북한 당국이 ‘민심 달래기용’으로 김정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배려금이라며 가구당 500원씩 나눠주고 있다는데 주민들이 순진하게 ‘김정은 대장님’이 왔다고 좋아할 때는 지났다”며 “북한 당국은 일이 터질 때마다 사탕과 채찍을 번갈아 쓰며 주민들을 통제해왔지만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자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외국지도부 연구국장도 “북한 화폐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과 주민 사이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킨 것이며, 앞으로 북한 지도부가 불안해졌을 때 이번 조치가 정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RFA는 전함. 고스 국장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3남 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데 있어 사회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한 것 같다”며 “단기적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탈북자 출신인 미국 북한인권위의 김광진 방문연구원도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많이 가진 주민의 재산을 빼앗고 다른 많은 주민들에게 선물을 쥐 당국에 줄을 서게 하려는 것 같다”면서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물가가 오르면 인민들에게 많은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RFA는 보도함.

● “러시아 극동지역서 北주민 12명 한국행” <교도>(12/24)

- 별목공과 탈북자 등 북한주민 12명이 지난 9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州)에서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도움으로 한국행에 성공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함. 교도는 러시아 보안 당국자와 다른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근로 비자가 만료된 별목공과 탈북자인 이은 2007년과 올해 초 사이 편지와 전화 등을 통해 모스크바 UNHCR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와 UNHCR이 이들의 한국행을 도왔으며 현재 다른 북한 주민 4명의 망명 신청건을 다루고 있다고 전함.



- 이 과정에서 러시아 이민당국은 북한 주민의 새로운 탈북 루트로 러시아가 이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를 통해 탈북 시도를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로, 교도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근로자가 집단으로 탈북을 감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함. 한국행이나 제3국 망명을 원하는 북한 주민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탈북을 시도해왔음.
- 교도통신은 이들 12명 외에도 예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북한 남성 근로자가 한국총영사관에 망명을 요청, 한국행을 승인받았으며, 2004년에도 두 명의 북한 주민이 한국영사관과 미국영사관에 각각 진입한 이후 한국행에 성공했다고 전함.
- 교도는 이어 원칙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국경을 넘어 탈북하거나 비자가 만료된 근로자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고 있지만, 한 러시아 이민관리는 망명에 성공한 이번 12명의 경우처럼 유엔을 통해 망명을 요청하면 인도적 관점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함. 러시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극동의 아무르주에만 현재 1천700명의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러' 외무부 “서해 상 남북한 자제력 보여야”(12/22)

- 북한이 서해 상 군사분계선 부근의 자기 측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22일 남북한 당국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최대한의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함. 러시아 외무부의 알렉세이 사조노프 정보언론 부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 구역’을 지정한 데 대해 우려한다”라며 “우리는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힘. 그는 아울러 “남북한 모두 서해상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력 충돌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나 성명전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함.

● “태압류 북한 무기 행선지는 이란”(12/21)

- 태국 정부가 최근 압류한 북한산 무기의 행선지가 이란일 가능성이 커짐.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자 인터넷판에서 압류된 항공기의 비행 계획서를 토대로 무기밀매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함.
- 무기밀매 연구기관인 미국의 트랜스암스(TransArms)와 벨기에의 국제평화정보(IPIS)는 조만간 내놓을 보고서 초안에서, 입수한 비행계획서를 토대로 볼 때 비행기의 최종목적지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라고 명기함. 태국을 경유한 항공기가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에서 연료를 주입한 후 테헤란으로 향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함.
- 보고서는 이 무기의 최종목적지를 알 수는 없다면에서도 이란이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이라크 지역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음을 상기시킴. 미국 국가정보국도 이 비행기의 행선지가 중동 지역이라고 18일 밝힌



- 바 있음. 보고서는 또 이 비행기가 평양에 가기 전에 아제르바이잔의 공군기지를 들렀는데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함. 아울러 비행 계획서 상에는 화물이 ‘석유산업 예비부품’이라고 적시돼 있었음.
- 화물 리스트는 총 8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데 유정 굴착장비 ‘MTEC6’ 부품, 주문형 광물탐사장비 부품 등으로 표기돼 있었음. 각각의 항목에 따라 박스 수, 중량, 부피 등도 표기돼 섬세하게 위장한 흔적이 역력함. 보고서는 해당 항공기가 마약 밀매 때문에 경계가 삼엄한 태국을 경유한 데 대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함.
 - 비행계획서와 자세한 화물 리스트 등으로 미뤄볼 때 승무원들이 운반 중인 화물의 정체를 정말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함. 화물 운송 주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보고서는 밝힘. 해당 항공기는 에어웨스트라는 그루지야 회사 소유물로 등록돼 있는데, 에어웨스트는 항공기를 SP트레이딩이라는 뉴질랜드 회사에 지난 11월 임대함.
 - SP트레이딩은 또 다른 회사가 소유한 유령회사로 보임. SP트레이딩은 이 비행기를 홍콩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임대했고, 해당 홍콩 회사는 제2의, 제3의 회사 소유임. 마지막 소유주는 영국령 버진군도에 본사를 두고 있음. 또 해당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한 회사 소유라는 설명도 내놨음. 에어웨스트측은 SP트레이딩에 항공기를 임대해줬을 뿐 더 이상은 알 수 없다고 밝힘. 즉 화물의 운송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일 관계

● 日문부상, 독도 자국 고유영토 주장(12/25)

- 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이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은 25일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새 고교 지리역사 교과서 해설서와 관련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못 박았음. 그는 고교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데 대해 “보다 간결화하자는 의미에서 ‘중학에 입각해서’라는 표현에 집약했다”고 설명함. 이는 작년 7월 14일 문부성이 발표한 중학교 해설서에서 독도가 자국영토이며 북방영토(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와 마찬가지로 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가와바타 문부상은 이어 “이달 초순 원안을 관방장관에게 보고했으나 집필이나 공표시기와 관련 한국 측을 배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힘.
- 문부성의 스즈키 간(鈴木寛) 부대신(차관)도 전날 자국 언론을 대상



으로 한 브리핑에서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영토문제를 어떻게 교육하느냐는 상대국을 배려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함. 그는 또 “일선학교의 재량을 늘리기 위해 지도요령 등을 간결히 하는 ‘대강화(大綱化)’를 민주당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문부성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의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새 고교 교과서 해설서를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함. 교과서 해설서는 약 10년마다 개정되는 지도요령을 보완하기 위해 문부성이 작성해 교과서 편찬과 수업의 지침으로 삼고 있음. 일본의 고교에서는 이미 지리교과서 14종 가운데 10종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취급하고 있음. 문부성은 새 고교 지리역사 교과서 해설서에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 정부 “한·일간 영토문제 없다”..유감 표명(12/25)

- 정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관계 없이 한·일 간에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에 영토 문제와 관련, ‘독도’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이후 가까워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 독도를 명기하며 영유권을 주장했던 지난해 7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당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논평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짐.
- 또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짐. 다만 대한민국의 영토문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나. 미·중 관계

● “美, 대만미사일 개량 승인”..中 반발(12/26)

- 미국이 대만에 판매한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한 성능개량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26일 AFP통신에 따



- 르면 미국의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은 11억달러 규모의 대만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에 대해 지난 23일 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음. 미국 국방부는 2007년부터 미 의회에 대만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계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
- 레이시온 관계자는 “레이시온은 40년 이상 대만에 선진 군사기술과 무기를 제공해 왔다”면서 “(이번 승인으로) 우리는 대만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함. 이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앞서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지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함.
 - 미국은 UH-60(블랙호크) 헬기와 디젤잠수함 등을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짐. 현재 중국은 1천500기가량의 미사일을 대만을 향해 배치해 놓고 있으며 대만은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F-16 C/D형 전투기 등 첨단무기 도입을 원하고 있음.

● 유엔인권수장 “류샤오보 징역형, 불길한 징조”(12/26)

-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25일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 53)에게 징역 11년 형이 선고된 데 대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 이행에 있어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우려함. 필레이 대표는 “류샤오보에 대해 유죄판결과 함께 극히 과중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앞으로 중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더 심각한 규제가 있을 것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함.
- 그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식인들과 법률가들, 언론인들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주목해왔으며, 이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이뤄온 급격한 발전의 긍정적 측면”이라며 “하지만 류샤오보의 사례처럼 흐름을 심각하게 거스르는 사건들이 일어날 위험성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함.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4일 체제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류샤오보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함.

다. 미·일 관계

● “美항모 1973년 日 배치 당시도 밀약”(12/27)

- 지난 1973년 미군의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모항으로 활동했을 당시 양국은 이 항공모함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입항할 경우에도 안전보장조약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밀약을 맺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27일 보



도함. 핵 탑재 함선의 일본 내 입항은 1960년에 맺은 양국 안전보장 조약에 따라 양국 간 사전 협의 대상임.

- 하지만 양국은 당시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밀약을 맺은 것으로 속속 드러남.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 항구를 모항으로 하면서 정박하는 미국 항공모함의 핵 반입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밀약의 존재가 일본측의 문서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함. 이런 내용은 일본 외무성의 핵 밀약에 관한 내부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록이 발견되면서 확인됐음. 한편, 일본 정부는 1960년 핵 밀약의 근거가 되는 합의를 미국측과 체결하고도 3년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함. 외무성의 핵 밀약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당시 밀약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은 1963년까지는 내부 문서에서도 1960년 합의 내용을 문제시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음.
- 핵 밀약과 관련해서는 1963년 3월에 이케다 하야코(池田勇人)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핵탄두를 실은 배는 일본에 기항할 수 없다”고 밀약에 반대되는 답변을 해서 미국측을 놀라게 함. 이에 당시 에드윈 라이샤워 주일 미국대사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외상을 만나 밀약에 대해 설명했다고 미국의 공문서에 기록돼 있어서, 핵 밀약을 둘러싼 양국 간 해석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하토야마 “후텐마 괌 이전 무리”(12/27)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26일 미·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오키나와(沖繩)현의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지역과 관련, “미국령 괌으로의 이전은 무리”라고 국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27일 교도(共同)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연립여당인 시민당이 괌 이전을 검토하는데 대해 “하나의 후보지로서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을 시기가 있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역지력의 관점에서 볼 때 괌에 후텐마의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함.
- 이어 사회자가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나”라고 질문하자 하토야마 총리는 “그렇다”라고 답함. 하토야마 총리는 8천명의 해병대원이 괌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그 이상이라면 매우 어렵다”고 거듭 강조함. 앞서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25일에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 지역 결정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이전지 결론 시점 명시 반대 및 괌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시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연립 여당내 논란이 예상되고 있음.
- 한편,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이후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미·일 합의는 중요하다”, “연립정권 유지가 중요하다”, “오키나와 현



- 민의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며 종전 미·일 합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엇갈린 발언을 해서 혼란을 자초한데 대해 “결정될 때까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성함.
- 이어 그는 “다른 각료와도 제대로 협의, 말해서는 안되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각료도 각각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한 경향이 있다. 총리와 방위상이 한 사람이 발언하는 것처럼 됐어야 했다”고 각료들의 엇갈린 발언이 문제를 키웠다고도 지적함.

라. 미·러 관계

● 러시아 외무 “美와 전례 없이 핵무기 감축”(12/22)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2일 “미국과 러시아가 마련 중인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에 전례 없는 핵무기 감축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관영 뉴스통신 리아 노보스티와 인터뷰에서 “양국은 이번 협정에서 전략 방어 무기 숫자를 과격하다고 할 정도로, 과거에 볼 수 없던 규모로 줄일 것”이라고 말함. 양국은 지난 1991년 맺은 START-1 후속 협정을 위해 수개월째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시한(12월5일)을 넘기고도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모스크바에서 만나 후속 협정이 발효되면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를 1천500~1천675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천100개로 줄인다는 후속협정 초안 양해각서에 서명함.
- 지난 19일 8차 협상을 마친 양국 협상단은 성탄 휴가에 들어간 상태며 러시아 신년 연휴(1월1~10일)가 끝나는 내달 중순 이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짐.
- 라브로프 장관은 “새 협정은 상호신뢰라는 원칙 아래 전적으로 (양국의 입장을) 대등하게 고려한 문서가 될 것이며 이 기본적 기준을 조율하는데 3~4개월이 걸렸다”라며 협상에 진통이 있었음을 시인함. 그러면서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새해 들어서는 모든 협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함. 전날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장도 “최종 승인을 위한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지만, 우리는 내년 초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함.
- 마카로프 총참모장은 “START-1은 러시아에 불리했다”라며 “이번 협정은 균형되고 상호 이해할 만한, 양측 이해관계에 모두 부합하는 동시에 핵 역지력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 협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음.
- 한편, 현재 미국은 1천195개 각종 발사 수단과 5천573개 핵탄두를, 러시아는 881개의 발사수단과 3천906개 핵탄두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마. 일·러 관계

● 日 외상, 러에 북방영토 조속반환 요구(12/25)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북방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러시아 파트너십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며 조속한 영토 반환을 요구했다고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함. 오카다 외상은 지난 24일 러시아의 인테르팍스통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무기한 연기하려 해 일본 국민이 불신을 품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함. 이는 오카다 외상의 기존 발언보다 강경한 것으로 러시아 측의 반발이 예상됨. 일본과 러시아의 정상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후 2차례 만나 북방영토 문제를 논의해왔음.
- 일본 정부가 지난달 “북방영토가 불법 점거되고 있다”고 밝히자,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수정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겠다”고 불만을 표시함.
- 오카다 외상은 28일로 예정된 러시아 외상과의 회담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카다 외상은 인테르팍스와의 회견에서 “북방영토 문제가 발생한지 60년이 넘었는데 해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제창하려면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는 부자연스럽다”고 강조함.

바. 기타

● 한국, 사상최대 47조 규모 UAE原電 수주(12/27)

- UAE(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총 400억달러(한화 47조원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27일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수주함. 이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규모의 해외수주로, 이명박(MB) 대통령이 막판 UAE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외교를 펼치면서 앞서 나가던 프랑스 컨소시엄을 제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6일 UAE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7일 오후 에미리트 팰리스호텔에서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 수주를 확정함.
- 이 대통령과 칼리파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압둘라 UAE 외교장관 간에 체결된 한.UAE 경제협력협정, 김쌍수 한전 사장과 칸둔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회장 간에 서명된 원전사업 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함.
- 이 대통령은 이어 아부다비 힐튼호텔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프로젝트는 규모 면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이지만 보다 더 의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발전 시설을 수출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나란히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됐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칼리파 UAE 대통령과 원자력산업뿐 아니라 교육, 첨단과학, 안보 여러 면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갖기로 했다”며 “앞으로 UAE와의 관계를 통해 제2의 중동 붐을 아마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힘.
-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가 참여한 한전 컨소시엄은 프랑스 아레바(AREVA) 컨소시엄, 미국 GE, 일본 히타치 컨소시엄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됨.
- 한전 컨소시엄은 이번 계약으로 1천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설계·건설하는데 첫 호기는 오는 2017년 준공하고 나머지 3기는 2020년까지 완공함.
- 일단 발전소 시공 등 건설 부분의 수주액만 200억 달러로, 중형 승용차 100만대 또는 초대형 유조선(30만t급) 180척을 수출하는 금액과 맞먹고, 원전 수명 60년 동안의 운전, 기기교체 등의 운영에 참여해 추가로 2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음.
- 또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건설 기간 10년간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건설과 기기 제작, 설계, 원전 기술개발, 금융 등 원자력 관련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까지 고려하면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78년 미국 기술에 의해 고리 원전 1호기를 첫 가동한 지 30여년만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처음 수출,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함.
- 이 대통령은 UAE 원전 수주를 놓고 한국, 프랑스, 미국 등의 경쟁이 격화되자 한·UAE간 정부차원의 협력을 제안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이번 입찰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지난달 이후 6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지원 외교를 폈음.

● 한·UAE 정상 ‘전략적동반자관계’설정 합의(12/27)

-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자는 데 합의함. 양국 정상은 이날 아부다비 시내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난 1980년 수교 이후 특별히 성격을 규정하지 않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키로 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함.
- 이는 양국이 각각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처지에 있다는 공감 아래 에너지 분야의 협력 성과를 기초로 양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임. 이 대통령은 이어 UAE 정부가 한국전력 컨소시엄을 차기 UAE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하는데 대해 사례하고 “지난 30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원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또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이 같은 원자력 분야 협력이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한 뒤 칼리파 대통령의 내년중 방한을 초청함. 두 정상은 이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번 원전 건설 협력을 계기로 원자력 분야뿐 아니라 정보기술(IT), 건설, 플랜트, 금융투자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음.

● “오자와, 당 해체시 22억 엔 챙겨”<日신문>(12/27)

- 일본 여당인 민주당의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이 과거에 이끌던 신생당과 자유당을 해체하고 다른 당으로 합류할 때 이들 정당에 남아있던 자금의 거의 전액인 22억엔을 자신이 운영하는 정치단체로 가져갔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7일 밝힘. 신문에 따르면 오자와는 이 자금들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친족을 위해서도 씀. 이 자금들 가운데는 정당교부금 등 국고에서 나간 돈도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먼저 오자와 간사장이 대표간사로 있던 신생당을 해체하고 신진당에 합류한 1994년 12월에는 신생당 본부 및 10개 지부에 남아있던 자금의 거의 전액인 9억2천526만엔이 정치단체 ‘개혁포럼 21’로 이전됐음. 이 포럼은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오자와 간사장의 개인사무소를 소재지로 두고 있으며, 오자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 2003년 9월 오자와 간사장이 당수였던 자유당이 민주당과 합병하면서 자유당을 해체했을 때 남아있던 15억5천715만엔(이 중 5억6천96만엔은 정당교부금)은 소속 의원 등과 관련된 35개 정치단체에 500만엔씩 분배되고, 이 당의 정치자금 단체인 개혁국민회의에는 13억6천186만엔이 돌아감. 개혁국민회의는 오자와 간사장이 젊은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오자와 이치로 정경숙’의 운영 모체임. 개혁국민회의는 사무실 운영비로 매년 2천만엔 안팎을 계상하고 있으며, 2006~2007년에는 오자와 간사장의 친족에게도 ‘조직유지비’로 총 495만엔을 지급함. 오자와 간사장 측은 이에 대한 해명 요구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함.

● 中, 내년 3월 양회 개막..선거법 개정(12/27)

- 내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월5일 개막함. 전인대는 26일 4박5일 간의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폐막하면서 내년 전인대와 정협의 개막 일정과 주요 안건 등을 확정함.
- 내년 양회에서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업무보고와 예산보고 등 일상적인 안건 외에 선거법 개정안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임. 중국은 1979년 선거법을 제정한 이후 1982년, 1986년, 1995년, 2004년 등 네 차례 개정한 바 있음. 내년에 다뤄질 제5차 개정안에서는 역차별받고 있는 농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대회 대



표를 인구비례로 선출하도록 함. 기존 선거법은 농촌지역 인대 대표가 대표하는 사람 수를 도시의 4배로 규정해 농민들의 선거권을 도시민의 4분의 1로 제한함.

- 또 전국 및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시 입후보자 수가 선출자수보다 많아 후보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차액선거제를 명문화함.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선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함.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성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선거가 아닌 하위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의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음.

● 하토야마, 개헌 언급..총리 취임 후 처음(12/26)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일제히 보도함.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 정권이 9월16일 발족 이래 개헌 문제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민방 라디오 프로그램을 녹음하면서 “꼭 (헌법) 9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지방과 중앙 정부의 관계를 대역전시키는 지역주권이라는 의미에서 개정하고 싶다”고 말함. 다만 개헌 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총리가 목청을 높여 주장하면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각보다는 민주당 중심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힘. 또 개헌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을 고려해 타이밍을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헌법을 바꾸려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중의원 480석 중 308석, 참의원 242석 중 115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듯 “당파를 초월해서 의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자민당과의 협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밝힘.
- 하토야마 총리는 야당 시절 (군대가 아닌) ‘자위대’ 대신 (군대인) ‘자위군’을 보유하자고 주장한 적도 있는 등 개헌론자로 알려졌지만 총리 취임 이후에는 연립 파트너인 사민당이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해 헌법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음.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민당이 이를 바꾸길 원하는 반면 사민당과 공산당 등은 극구 반대하고 있음.
-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령 괌으로의 이전 주장을 일축, 사민당과 선을 그었음.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은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는 현안을 마무리하자 헌법 논의가 고개를 쳐들었다”고 지적했고, 지지통신은 “사민당이 반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예상함.



● “中, 유엔 분담금 늘어난다” <중국신문사> (12/25)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이 유엔에서의 분담금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5일 보도함. 이 통신은 일본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해 2010년부터의 각 회원국 분담금 비율이 미국의 경우 22%로 변화가 없지만 중국은 기존의 2.7%에서 3.2%로 늘어나게 된다고 전함.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16.6%에서 12.5%로 비중이 줄어들고 독일도 8.6%에서 8%로, 프랑스도 6.3%에서 6.1%로 모두 비중이 줄어들게 됨.
- 교도통신은 회원국의 경제능력으로 분담금 액수를 산정하는 현행 방식에 따라 중국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신흥경제국의 부담은 늘어나고, 일본 등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선진국의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보도함. 유엔은 24일 반기문 사무총장 주재로 총회를 열어 51억 6천만 달러에 이르는 2010~2011년도 유엔 예산을 승인함.
- 중국신문사는 “유엔 결의에 따르면 2010~2012년까지의 각국의 예산과 평화유지활동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변화가 없다고 돼있다”면서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은 아직 유엔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해 여지를 남김.

● 中 2008년 GDP 성장률 9.6%로 상향조정(12/25)

-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이전에 집계됐던 것보다 더 높아짐. 중국 국가통계국은 25일 ‘2008년 수정 국내총생산(GDP) 공고’를 통해 작년 GDP가 당초 집계한 30조670조 위안에서 31조4천45억위안(5천338조7천650억원)으로 수정됐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중국의 작년 GDP 성장률은 9.0%에서 9.6%로 상향 조정됨. 수정된 산업별 GDP총액은 1차산업 3조3천702억위안, 2차산업 14조9천3억위안, 3차산업 13조1천340억위안 등임.

● 中 종합국력 세계 7위 <중사회과학원> (12/24)

- 금융위기를 거치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라는 평가를 받아 온 중국이 종합국력은 세계 7위에 불과하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음.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4일 발표한 ‘2010년 사회황서’에서 11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영토 및 천연자원, 인구, 경제, 군사, 과학기술, 사회발전, 발전의 지속성, 국내정치, 국제공헌 등 9개 부문에 걸쳐 종합 평가한 결과 중국의 국력은 7위에 불과했다고 밝힘.
- 미국과 일본, 독일은 나란히 1~3위에 올라 세계 3강을 지켰으며 이어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순이었으며 중국에 이어 영국,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이 자리함. 황서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경제, 군사, 과학기술, 국제공헌지표에서 모두 수위에 오르는 등 주요 방면의 평가에서 우세했다고 설명함. 다만 천연자원 보유가 2위에 머물렀고 사회발전, 지속성, 국내정치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음.
- 일본은 영토와 자원, 인구, 군사 부문의 점수가 낮았지만 많은 항목에



서 상위권에 속함. 황서는 군사 부문이 질보다는 양적인 평가로 진행돼 군사력의 외형 규모는 적지만 장비 등이 우수한 일본의 실제 군사력은 이번 평가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부연함.

- 종합 국력이 중위권으로 분류된 러시아와 중국은 대부분 항목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영토 및 자원, 군사, 인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군사지표 점수 상위 1~3위를 차지함.
- 미국은 연간 국방예산이 다른 10개 국가의 국방비 총액보다 무려 32%나 많았음. 러시아는 탱크 보유량이 2만2천800대로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무기 수량에서 1위를 차지함. 미국과 중국의 탱크 보유량은 각각 7천여대씩이었음. 중국의 군사력은 무기의 수량과 군인 수가 많아 미국에 이어 2위로 평가됐음.
- 황서는 이와 함께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70~100달러 범위에서 거래되고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봄. 내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취약한 금융체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인 세계 각국의 재정적자, 선진국들의 경기 부진, 가계자산 감소로 인한 소비여력 약화 등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됨.

● 美 “국제사회 대북공조 올해 핵심 성과”(12/24)

- 미국 국무부는 올해 미국이 추진한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외교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라고 평가함.
- 국무부는 23일 공개한 ‘개입(engagement)의 새 시대’라는 제목의 2009 회계연도 재정보고서를 통해 미 외교의 첫 번째 전략적 목표는 평화와 안전보장 달성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채택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을 비난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 것”이 이와 관련된 핵심 성과 중 하나라고 밝힘.
- 또 대북공조 유지 외에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상 착수, 미·중 전략경제대화 첫 개최 등도 핵심 성과라고 전함.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추진, 무기기술 확산, 인권, 인도적 문제 등 광범위한 북한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올해 초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했다고 소개함. 이와 관련, 보고서는 미국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복귀 등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힘.

● 中-대만, 농·공산품 등 3개 협정 서명(12/22)

- 중국과 대만이 22일 제4차 양안(兩岸)회담 본회담을 열고 공업, 농업, 수산업에 관한 3개 협정을 체결함. 양안 회담 대표인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장빙쿤(江丙坤) 이사장과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천원린(陳雲林) 회장은 이날 대만 타이중(臺中)에서 열린 4차 본회담에서 ▲농산품 검역검사협력협정 ▲공산품 표준 계량·검사·인증협력협정 ▲어선선원 노무협력협정에 서명함.



- 양측이 이날 3개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양안회담을 통해 중국과 맺은 협정은 12개로 늘어남.
- 중국측 대표인 천윈린 회장은 “양안의 평화적 발전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며 아무도 이 길을 방해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과거 10년, 20년, 심지어 60년 안에도 이를 수 없었던 일들을 성취해냈다”고 자평함.
- 이번 회담에서 당초 서명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세무협력 협정은 서명이 연기됨. 해기회와 해협회는 ‘기술적 문제들’ 때문에 연기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세원(稅源) 노출 우려, 주권 문제 등 다른 이유들도 연기 사유로 거론되고 있음. 이와 관련, 대만 측의 장빙쿤 이사장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조율하기 위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함.
- 또 중국과 대만은 이날 회담에서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과 지적재산권보호를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제5차 양안(兩岸)회담 의제로 확정했다고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밝힘.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부터 5차 회담 전까지 ECFA와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양안 간 접촉과 협상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
- 사실상 관영 기구들인 해기회-해협회 간 양안 회담은 마잉주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후 6월 베이징(北京)에서 1차, 11월 타이베이(臺北)에서 2차, 올해 4월 난징(南京)에서 3차 회담이 열림.

● 中, 캄보디아에 8.5억弗 규모 원조 제공(12/22)

- 캄보디아 정부가 망명을 요청한 위구르 난민 20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캄보디아에 8억5천만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로이터통신은 20일 외교소식통 등을 인용해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캄보디아 방문에 때맞춰 14건, 8억5천만달러 규모의 원조를 캄보디아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이 합의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10월5일 중국 시추안(四川)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훈센 캄보디아 총리 간에 이뤄진 8억5천300만달러 상당의 원조 공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함. 소식통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위구르 난민 강제송환 이틀만에 나온 사실에 주목하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도로와 관제시설에서부터 국회 신(新)청사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43억달러의 원조를 캄보디아에 제공했다고 밝힘. 이로써 중국은 캄보디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국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함.
-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9일 밤(현지시각) 수도 프놈펜에서 망명을 요청하던 위구르 난민 20명을 중국의 요청에 따라 강제 송환함. 이들은 지난 7월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유희사태 당시 중국을 탈



출해 프놈펜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사무소에서 체류하면서 일시 보호를 받아왔음.

- 캄보디아 내무장관인 키우 소피크 중장은 이들이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19일 오후 9시15분께 특별기 편으로 중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힘. 중국 정부는 이들이 범법자라는 주장을 내세워 캄보디아 정부에 송환을 압박했지만 미국과 유엔,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는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과 학대를 당할 수 있다며 송환 반대 의사를 밝혀왔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